

## 동남아에서의 미·중 경제관계의 변화\*

김종길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10여 년간 동남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미·중 간의 경제력 이동을 — 즉, 중국의 부상 및 미국(일본)의 쇠퇴 — 무역, 투자 및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경제력 이동의 향방을 결정하는 동남아 역내/외의 경제 환경 변화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남아 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주시하면서 이것이 동남아 지역과 미·중 간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에 주는 영향을 타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변화가 한국의 경제외교 정책의 방향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였던 점은 앞으로 중국의 장기적 경제성장과 동남아와 중국 간의 경제관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이었다. 왜냐하면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주출거(走出去) 전략’(해외직접투자 전략), 성장 전략의 변화를 시사하는 12차 5개년계획 등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은 중국 자체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넓게는 세계 경제에, 좁게는 동남아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경제력 이동,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주출거(走出去) 전략, 12차 5개년계획

### I. 서론

중국의 부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측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는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2010년에 이미 미국의 수준을 추월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일반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2010년 GDP는 \$5.7조(trillion)이나 PPP 기준으로는 \$14.8조로 미국의 \$14.6조를 추월했다는 것이다(Subramanian, 2011).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이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여지없이 (아니면, 보다

\* 이 글은 외교통상부 용역연구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중관계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전략』(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년 3월) 및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년도 학술대회 “세계의 중심 이동과 한반도 I”(11월 25일)에서 발표된 논문을 축약·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극명하게 관찰된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중국의 힘, 중국의 영향력이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역시 중국을 이웃으로 하는 동아시아, 그 중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오랫동안 정치·외교·경제적으로 미국의 힘에 많이 경도되었던 동남아 지역에서 지난 10여 년간 구체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부상은 이 지역에 향후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일 수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다이나믹한 중국 경제의 성장은 동남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동남아 역내 시장에서 뿐 아니라 특히 제3시장에서 동남아 지역 상품에 강력한 경쟁이 될 수 있다.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보더라도 점증하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이들 지역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종속성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II장에서는 먼저 동남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경제력의 이동 또는 경제관계의 변화를 무역 및 투자구조의 변화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목격되는 특징적 양태는 중국의 적극적 경제공세와 이와는 대조적인 미국의 수세적 방어 또는 ‘benign neglect(선의의 무시)’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동남아 경제정책 중 무역 측면에서의 아세안-중 자유무역협정(ACFTA: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sup>1</sup> 체결과 해외직접투자전략인 ‘주출거(走出去) 전략’의 채택이라고 보고 이를 집중 조명한다.

이러한 경제력 이동 현상 및 요인에 대한 설명에 이어 III장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동남아 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점검한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물론 미·중 간의 경제력 이동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에서의 경제 환경의 변화는 미·중 간 경제력 이동의 원인이자 결과로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동남아와

<sup>1</sup> 물론 중국에서는 이를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CAFTA: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이라 칭하나 이 논문에서는 아세안의 시각에서 본 ACFTA를 사용한다.

미·중의 경제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이 시도된다. 그러한 전망은 물론 누구라도 일견을 피력해 보기는 쉽겠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도 정확하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우리는 다만 동남아 역내 및 역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에 주는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한 점은 향후 동남아와 미·중 간의 경제관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및 중국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다. 왜냐하면 ACFTA의 효과적 이행, ‘주출거 전략’의 지속적 보강,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 중국 성장전략의 변화를 시사하는 12차 5개년계획의 이행 등은 중국 자체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넓게는 세계 경제에, 좁게는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 커다란 경제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간단한 요약과 함께 그러한 향후 전망이 한국의 대동남아 경제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 볼 것이다.

## II. 동남아에서의 미·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 개요

동남아에서 중국의 부상 및 미·일의 상대적 쇠퇴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힘의 이동(power shift)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Lum et al., 2008). 첫째, 2007~ 2008년 이후 동남아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국보다 크다. 둘째, 중국이 세계적으로는 무역 흑자를 보이지만, 아세안과의 교역에서는 무역 적자를 보인다. 셋째,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하여 미국보다 더 빠르게 아세안과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있다. 넷째, 교역 면에서는 중국보다 뒤지지만 미국은 – 아직까지는 – 아세안의 보다 중요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원이다.

## 1. 동남아와 미·중의 무역관계

아세안의 관점에서 중국은 2009년에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역외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즉, 아세안사무국의 자료(ASEAN Sec., 2010)에 의하면 아세안과 중국과의 2009년 총교역량은 1,782억 달러(또는 전체의 11.6%)로 중국은 아세안의 가장 큰 역외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미국은 1,496억 달러, 전체의 9.7%로 네 번째).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은 816억 달러(전체의 10.1%)로 세 번째 역외 수출시장(미국은 822억 달러, 10.2%로 두 번째)였으며, 수입액은 966억 달러로(전체의 13.3%) 첫 번째 역외 수입원이었다(미국은 9.3%로 네 번째).

이러한 중국의 위상이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보면, 아세안의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1998년 3.5% 204억 달러)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5년 후인 2003년에는 2배 이상인 7.2%(596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6년에 10%(1,400억 달러) 수준을 넘어 2009년에는 11.6%(1,782억 달러)로 상승한 것이다.<sup>2</sup> 같은 기간 미국의 비중이 20.1%에서 9.7%로 하락한 것(금액으로는 1,156억 달러에서 1,496억 달러로 상승한 것)과는 극명히 대조된다. 아세안과 무역액을 보면 2007년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상회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무역통계(DOT: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10)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즉, 2001~2009년간 중국의 대아세안 총 무역액은 이 기간 360억 달러에서 1,826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아세안 지역의 비중도 7.05%에서 8.28%로 점증하였다. 특히 중국의 수입보다는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바, 이 기간 수출은 128억 달러에서 763억 달러로 약 6배 증가하였고, 수입은 232억 달러에서 1,063억 달러로 4.6배 증가한

<sup>2</sup> 2003년도의 급증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이후 전체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중국의 해외 무역을 반영하며, 2006년의 급증은 ACFIA의 발효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아세안 총 무역액을 보면 2007년까지는 중국보다 많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중국에 역전되었다. 또한 미국의 대아세안 총 무역액은 이 기간 1,235억 달러에서 1,493억 달러로 약 1.2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오히려 6.5% 수준에서 5.6%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보다 자세히 보면 미국의 대아세안 수출과 수입 모두 액수 면에서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미국의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아세안 지역의 비중은 각각 6%에서 5.1%로, 그리고 6.8%에서 6%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아세안과의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보인다(미국의 적자 폭이 중국보다 크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뿐 아니라 아세안에 대한 무역에서도 적자를 보이는데 반하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무역 흑자를 보이거나 아세안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동남아로의 직접투자(FDI) 유입

아세안의 교역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중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아세안의 중요한 FDI 유입원이다. 아세안사무국의 자료(ASEAN Sec., 2009)에 의하면 2008년 아세안으로의 미국 FDI 유입액은 33억 8,000만 달러(전체의 5.7%)로 미국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일본에 이어 아세안의 3번째 역외 FDI 유입원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비중이 10여 년 전까지 꽤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예컨대, 2000년 미국의 FDI 유입액은 전체의 31.0%였다). 한편, 2008년 중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액은 전체의 2.5%인 약 15억 달러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액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무시할 만한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과 최근에 급격히 신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의 증가세는 중국상무부의 『2008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에서 보다 자세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총 ODI는 2003년 28.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559억 달러로 약 20배 가

까지 급증하였으며,<sup>3</sup> 아세안으로의 ODI 역시 같은 기간 1.2억 달러에서 24.8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였다. 특히 후술되는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그중, ACFTA의 발효 및 '주출거 전략'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5년 이후 중국의 ODI의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2005~2008년간 중국의 총 ODI가 123억 달러에서 559억 달러로 4.5배 증가한데 반하여 대아세안 ODI는 1억 5,800만 달러에서 24억 8,400만 달러로 15.7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의 비중도 이 기간 유량(flow) 기준으로는 2005년 1.29%에서 2008년 4.44%로 증가했고, 저장(stock) 기준으로는 2005년 2.20%에서 2008년 3.53%로 증가하였다.

사실 아세안을 향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유량 기준으로 보든 저장 기준으로 보든 아직까지 2~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저장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홍콩 63.8%이며, 조세피난처(tax haven)인 케이먼, 버진아일랜드, 버뮤다를 합치면 83.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세피난처에서는 특별목적회사(SPE: Special Purpose Enterprise)가 설립되어 이를 통해 제3국에 투자가 행하여지는 통과(transit) FDI 형태가 이루어지므로 그 최종 투자선을 포착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sup>4</sup> 따라서 홍콩 및 이러한 통과 FDI를 제외하면 아세안으로의 실질적 직접투자액은 그 어느 다른 국가나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sup>5</sup>

<sup>3</sup> 중국의 ODI가 2005년 123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65억 달러로 두 배가 되고, 다시금 다음 해 2008년에 또 두 배 상승한 559억 달러가 되었으나 2009년에는 565억 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9년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약 50%나 감소되었음을 감안해야 하며, 실제로 중국은 2009년 세계 5위의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0).

<sup>4</sup> Transit FDI 비율이 높은 이유는 (1) tax haven을 통한 조세비용의 삭감, (2) SPE를 통한 중국에의 재투자(round tripping)로부터 외자유대조치를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홍콩의 경우, 당지에서의 사업 전개 이외에도 국제기능센터로서의 기능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transit FDI의 성격이 강하다.

<sup>5</sup> 2005년 말 스톡 기준으로 중국의 대아세안 10개국 직접투자액은 실질적으로 제1의 위치를 점한다. 싱가포르(3억 2,500만 달러), 베트남(2억 2,900만 달러), 태국(2억 1,900만 달러), 말레이시아(1억 8,700만 달러), 인도네시아(1억 4,100만 달러)는 모두 그 누계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들인데 여기에다 SPE를 통한 transit FDI의 유입 가능성도 있어 실제 투자액은 이를 상회할 것이다(眞家陽一, 2008: 59).

### 3. 중국과 미국의 대동남아 경제정책

#### 1) 중국의 적극적 대동남아 경제정책

앞에서 지적한 대로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교역 및 투자 급증은 전 세계적으로 본 중국 경제의 부상을 배경으로, 특히 중국의 인접 동남아 지역으로의 경제교류 가속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동남아와 중국의 교역 증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아세안-중국 간 ACFTA의 체결 그리고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 증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주출거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무역: 아세안-중국 간 ACFTA의 체결

먼저 ACFTA 체결의 과정을 보자.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의 아세안-중국 수뇌회의 당시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국무원총리가 FTA 체결을 제안한 이후 ‘아세안-중국 전문가그룹’이 설치되어 FTA 체결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보고서가 ‘Forging Closer ASEAN-China Economic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로서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의 아세안-중국 수뇌회의에서 제출되었다. 이를 기초로 양측은 10년 내 ACFTA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ACFTA의 실현을 통해 17억 소비자, 약 2조 달러의 GDP, 1조 2,300억 달러의 무역 총액을 갖는 지역 경제가 창출되며 또한 인구, GDP 및 무역에서 개도국에 의해 구성되는 최대의 FTA가 된다는 점이 역설되었다.

그 후 2002년 5월 북경에서의 ACFTA에 관한 고위급사무레벨 협의를 경유하여 그해 11월 아세안-중국 수뇌회의(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의 틀에 관한 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조인되었다. 주된 내용은 ① Early Harvest로서 농산품 8개 분야의 자율화 조치를 2006년까지(아세안의 신규 가맹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4개국은 2008~2010) 먼저 실시하며, ②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관세 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신규 가맹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FTA의 완성에 합의하였다.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의 아세안-중국 수뇌회의에서는 상품무역분야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고 2005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의 아세안-중국 수뇌회의에서

는 서비스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7월부터는 일부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도 시작되었다. 2009년 8월에는 투자 협정이 서명되고, 2010년 현재 중국과 ‘선발 아세안 6국’<sup>6</sup> 사이에 97%의 상품 관세가 철폐된 상태이다.

이렇게 ACFTA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측이 양보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眞家陽一, 2008: 45-46).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아세안이 관심을 갖는 많은 열대 농산물 분야에서 Early Harvest 조항이 있고, ② 신규 가맹국인 CLMV에 대해서는 자유화 완료 시기를 유예하는 등 중국 측이 아세안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보였기 때문이며, ③ 이에 더하여 중국은 당시 WTO 미가맹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CFTA 체결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 마이에 요이치(眞家陽一)는 이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眞家陽一, 2008: 47-49). ① 무역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 효과로 FTA는 교역량의 대폭적 증가뿐 아니라 아세안의 GDP를 0.86%, 중국의 GDP를 0.27%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추산되었다. ② 동아시아에서의 FTA 교섭주도권 확보 효과,<sup>7</sup> ③ 아세안에서 증대되는 중국 위협론을 해소하는 효과, ④ 정치·외교 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관계의 구축 효과로 FTA는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관계(예를 들면, 메콩강 유역 공동개발(6개국), 인도네시아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남지나해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간선도로의 정비, 역내통신망의 확립, 관광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의 구축에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⑤ 대만의 남향정책에 대한 견제효과로 대만기업의 대아세안 투자를 장려한 이등휘 전 총통의 남향정책 등 대만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2) 투자 - ‘주출거 전략’으로의 전환

2000년대에 들어 중국 경제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

<sup>6</sup> 아세안 10개국 중 공업화 및 경제발전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며 초기에 아세안에 가입한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을 말한다.

<sup>7</sup> 중국은 이를 통해 “그동안 정체되고 있었던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을 효과적으로 타개시키고 향후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갔다”(Zhang and Sun, 2008: 326).

국내 수요의 증대 등 새로운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아울러 무역 흑자의 누적 및 직접투자 유입의 증대로 외환 보유가 증대하고 위안화 절상의 압박을 받게 되자 중국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중국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게 되는 발전 전략상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10차 5개년계획에 들어선 2001년경부터 중국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발전 전략을 띄워 중국기업의 해외 전개를 장려·지원하고 있다(UNCTAD, 2006: 55; 김종길, 2008: 211).

‘주출거 전략’은 보다 공식적으로는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회 전국대회에서 제기된다. 이 대회에서는 기업의 대외투자를 장려하고 글로벌기업과 자주(自主) 브랜드를 육성하며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주출거 전략’이 명시되며, ‘인진래(引進來, 외자도입)’와 ‘해외직접투자’의 결합을 통한 개방/확대가 촉구된다. 나아가 2004년 7월 ‘주출거 전략’의 실시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공동으로 “對外投資國別產業指導目錄”을 공표한다.<sup>8</sup> 즉, 중국 정부가 최초로 국별, 산업별 대외투자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이 목록에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23개국 및 기타 44개국을 합친 총 67개국,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분야를 합친 총 5개 분야가 열거된다.

2004년 10월 상무부는 대외투자에 따르는 심사수속 간소화와 대외투자 촉진을 위해 ‘대외투자 및 기업 설립의 심사사항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상무부는 중앙기업 이외의 기업이 대외투자 및 기업 설립을 하는 경우 심사를 성급(省級) 지방정부에 위임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외환관리국도 대외투자의 외환 관리를 서서히 완화하여, 해외투자리스크 심사 및 대외투자 이익의 국내송금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해외 기업이 이익을 해외 기업에 증자하는 소위 ‘해외 재투자’를 허용하고 국내에서 차입된 외화를 대외투자에 사용함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후 외화 관리는 더욱 완화되어 2006년 7월부터는 ‘대

<sup>8</sup> 통칭 ‘대외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이 목록은 2005년 10월 ‘대외투자국별산업지도목록(II)’에 27개국이 더해지고 이어 2007년에는 ‘대외투자국별산업지도목록(III)’에 32개국이 더해져서 이제 총 132개국(지역)이 되었다.

외투자에 관한 외화관리정책의 일부 조정에 관한 고지'를 근거로 대외투자 시 외화구입제한이 철폐되고, 국가외화관리국의 외화 구입 규모에 관한 심사도 폐지되었으며, 외화투자관련 준비 비용의 외화 송금도 투자총액의 15% 내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 (3) 기타 경제협력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경제·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기 국가에 모두 60억 달러를 지원하여 동남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 바 있다(인민일보 00/10/08).<sup>9</sup> 중국이 당시 위안화 환율을 절하하지 않고 손해를 무릅쓰며 기존 환율(인민폐가치)을 유지한 것 자체가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위안화 때문에 발생하는 중국 제품의 수출 장애를 회피하고자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은 더욱 커다란 타격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처신은 당시 일본이 취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출금상환연기(roll-over) 요청에 대한 미온적·부정적 자세와 크게 비교된다. 아울러 미국이 IMF 요구 조건을 고집하고 무역자유화만을 추구하여 동남아 국가들의 불만을 야기한 것보다 대조적이다.<sup>10</sup> 이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에게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매력공세를 강화한 바 있다. 아세안과의 FTA 체결 이외에도 중국은 아세안국가 내에서는 싱가포르와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sup>11</sup>

<sup>9</sup> 이희옥의 글(2011: 61)에서 재인용

<sup>10</sup> 미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취했던 접근은 1994년 멕시코의 폐소위기 당시 미국이 그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발 빠른 정책과 대비된다. 물론 미국이 국경 너머로부터의 많은 실직 노동자와 농민들의 유입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한 정책의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IMF를 통하여 긴급금융, 재정을 강요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다시금 미국의 통제하에 복속시켰다는 비판이 있다(Heng, 2010: 9).

<sup>11</sup> 2010년 4월 현재 아세안 및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이외에 중국은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칠리, 코스타리카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홍콩과 마카오와는 경제권밀화협정(CEPA: Clos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대만과는 2010년 6월 해협양안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아세안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정하여,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 서명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거나 ‘아세안 plus 1’ 및 ‘아세안 plus 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과 미소(Smile)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남아 내륙국에 접경한 원난성과 광시성을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를 바탕으로 한 국경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 남부지역과 동남아 경제권을 연결시키기 위한 쿤밍-싱가포르 수송망건설, 범북부만개발계획,<sup>12</sup> GMS(Great Mekong Subregion)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3).

## 2) 한발 늦고 미온적인 미국의 대동남아 경제정책

앞에서 지적되었듯 미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아직도 굳건하다. 무역액은 2008년 이후 중국에 추월당했으나 그 이전에는 미국과의 무역액이 중국과의 무역액보다 훨씬 많았으며, 아세안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77년 이래 미국과 아세안 사이에는 매년 ASEAN-US Dialogue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미국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사는 경제관계의 증진이라기보다는 외교, 안보 등 비경제적인 측면이 훨씬 중요했다. 따라서 미국과 동남아 간 과거의 경제관계는 미온적인 benign neglect(선의의 무시)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부상이 경제적 팽창을 바탕으로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미국 역시 뒤늦게 중국에 대해 방어적·견제적 모습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10월 부시행정부 는 EAI(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를 출범하며 아세안국가들과의 보다 가까운 경제적 유대 추구의 목표를 명시한다. 여기에는 경제개혁과 개방을 약속한 국가

<sup>12</sup>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양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및 물류시스템 정비 및 화학,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산업협력을 포함한다.

들과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도 포함한다.<sup>13</sup> 이후 미국은 싱가포르와 FTA(2004년 발효)를 체결하였고, 기타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 FTA 협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발 빠른 관계 확장에 비하여 미국의 행동은 더디고 미온적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8월에야 미국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수진 슈워브(Susan Schwab)는 아세안과 TIFA에 서명하였다. 부시행정부는 2008년 4월 국무성 동남아담당 차관보인 스콧 마시엘(Scot Marciel)을 초대 아세안 대사에 임명하였고 자카르타에 US Mission을 설치하였다. 이어 2009년이 되어서야 미국은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결성 및 TAC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아세안과 미국 간 수뇌회담이 거행된 것은 아세안+3(ASEAN+3)<sup>14</sup>의 출범 후 10년이 경과된 2009년 11월이었다.<sup>15</sup> 2011년 6월 29일 미상원 외교위원회의 리차드 루갈(Richard Lugar) 의원은 미국의 관리들이 미국과 아세안 간의 FTA 교섭을 착수할 것을 권고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Senate Resolution 218), 미-아세안의 무역 관계가 2006년 조인된 TIFA 수준을 넘어 서야 함을 주장하였다.<sup>16</sup>

<sup>13</sup> 잠재적인 FTA 상대국은 WTO 회원국이며 미국과 중요한 무역 및 투자분쟁을 해결키 위한 무역 및 투자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과 TIFA에 서명하였다(Lum et al., 2008).

<sup>14</sup> 아세안+3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3개국과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협동 포럼이다.

<sup>15</sup>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지도자(태국의 아비지트 수상이 공동의장) 및 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하였고, 2010년 2차 회의에 동의하였다.

<sup>16</sup> 더불어 리차드 루갈 의원은 미-버마의 관계가 미국이 다른 아세안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은 버마가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버마 간 교역관계를 증진시켜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Berger, 2011: 2).

### III. 동남아 역내/외의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력 이동에 대한 향후 전망

#### 1. 동남아 역내/외의 경제환경 변화

이제 지난 20여 년간 동남아 지역에서 진행되어온 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물론 미·중 간의 경제력 이동과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에서의 경제 환경의 변화는 미·중 간 경제력 이동의 원인이자 결과로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1) 동남아 역내의 경제환경 변화<sup>17</sup>

첫째, 선발 아세안국가들이 자본 과잉의 시대에 들어서 있다. 과거 1990년대 전반에는 높은 투자율이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율이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투자율 하락의 기본적 원인은 국내투자 기회의 부족(수익성도 저하) 때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투자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자율 하락은 경제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개선 없이 동남아 경제가 다시금 높은 성장률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역내 교통망이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남아 지역의 총인구는 5억 8천만 명, 역내 총생산액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며 역내교역은 전체 무역의 25%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준의 도약을 가로막는 중요한 방해물 중 하나는 낙후된 교통망이다. 실제로 이러한 낙후된 교통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실로 지대하다고 추측된다.<sup>18</sup> 도로, 철로 및 해상로를 통한 교통망의 확대는 국내시장의 협소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및 기타 지역으로의 접근을 보다 용

<sup>17</sup> 이 부분은 대체로 박변순(2011)을 요약한 것이다.

<sup>18</sup> 한 예로, 교통망의 낙후로 인한 동남아 역내국가의 무역 손실액이 약 560억 달러, 전체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선진, 2011).

이하게 함으로써 수출의존형 동남아 국가들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역내 국가들 간에 개발 격차가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역내 10개국은 면적, 인구, 경제 규모뿐 아니라 발전의 역사와 전개 과정, 현재의 발전 수준과 향후 잠재력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들 10개국을 다양한 분석 목적으로 그룹화한다면 ① 경제발전 및 공업화의 정도에 따라 선발 아세안과 후발 아세안(CLMV: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②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내륙 동남아국과 해양 동남아국, ③ 정치적 역사 및 경제발전의 경험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의 체제전환국들과 시장경제체제의 전통이 오래된 친서방국들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문제는 한편의 국가군이 다른 한편의 국가군에 비하여 경제발전의 시발시점, 수준, 양태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당면하는 경제문제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넷째, 아세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소위 ‘동아시아 발전모델’ — 높은 저축 및 투자율, 국가에 의한 시장 친화적 정책, 그리고 수출 의존형 판매구조 — 을 통하여 성장했으나 이러한 성장 모델은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부터 한계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모델 중 동남아에서의 성장 모델은 외국인 직접투자 주도의 수출지향형 공업화였으며 이는 해외시장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수출 의존형, 노동집약적 산업구조하에서 한정된 해외시장을 놓고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 2) 동남아 역외의 경제환경 변화

먼저, 중국 경제력의 동남아로의 확장을 들 수 있다. 무역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은 한편으로는 동남아에 더 넓은 수출 시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동남아의 상품을 구축하기도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면에서 보면, 1980년대 및 9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맞이했던 동남아의 제조업에 대한 FDI 유입이 이제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외자도입(引進來)을 통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FDI의 아세안지역 대체효과의 결과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이 채택한 인진래(引進來)를 보완하는 주출거, 즉 해외로의 직접투자의 확대는 아세안으로서는 위기로부터 기회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내륙 동남아 국가로 중국 경제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중국과 국경을 접한 내륙 동남아 국가들과의 국경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안화 경제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접 아세안국과 중국 간 무역의 증가는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는 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내륙 아세안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며, 중국 역시 윈난성 등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써 국경무역을 지원하거나 고속도로 및 철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 및 일본의 상대적 쇠퇴 현상을 들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세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세로 전환한 듯 보인다. 즉, 부시 정부 시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북한 핵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아시아 내 중국의 부상을 방관한 데 반하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09년 취임 직후 한·중·일 및 인도네시아를 방문(2월)했고, 아세안지역회의(ARF: ASEAN Regional Forum)에 참석하여 “America is back in Asia”를 선언(7월)하였다.<sup>19</sup> 한편, 일본 경제의 상대적 쇠퇴의 결과 중 하나로 2010년 일본의 GDP(5조 4,742억 달러)는 중국(5조 8,786억 달러)에 역전되었다. 일본은 1968년 이후 42년 만에 중국에 세계 경제대국 2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sup>20</sup>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이후 거의 20여 년간 성장 동력을 잃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 총체적 국면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sup>19</sup> 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방콕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오랜 친구이다”라고 선언했다(Clinton, 2009).

<sup>20</sup> “일본경제신문은 ‘중국경제가 20년 후에는 일본의 4배가 된다’고 보도한다. 즉, 2030년에는 중국의 GDP가 26조 3,550억 달러로 일본의 6조 3,550억 달러를 4배 압도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GDP가 1조 1,980억 달러로 일본의 4조 6,670억 달러의 1/4 수준이던 것이 2000년이었음을 감안하면 둘의 관계는 30년 만에 뒤바뀌게 된다”(조선일보 2011/2/19-20).

## 2. 동남아 역내/외의 경제 환경 변화에 기인한 향후 전망

이러한 작금의 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동남아에서 과거 10여 년간 진행되어 온 미·중 간 경제력 이동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이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제 이러한 경제력 이동에 투영된 동남아 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요인이 동남아와 미국 및 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에 주는 영향을 점검하기로 한다.

### 1) 동남아 역내의 경제환경 변화에 기인한 향후 전망

첫째, 역내 저축의 증가 및 투자의 감소 현상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으나, 이는 분명 향후 동남아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측면은 중국이 새로운 투자의 공급원으로 부상하여 그 부족분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증대는 기업들에 의한 직접투자뿐 아니라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의한 인프라 투자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동남아 역내에서 축적된 저축이 역내에서 투자의 기회를 다시금 찾는 선순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낙후된 역내 교통망 역시 시장 확장에 제약을 가하면서 아세안의 향후 경제성장과 무역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교통 및 통신 인프라의 구축 도움이 기대되는 바, 특히 중국의 간선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건설에 의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 및 경제 외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내륙 아세안국가들이 국내지선 교통망의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집중과 선택에 의한 한국의 기여가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셋째, 역내 국가들 간의 개발 격차가 문제됨은 사실이나 그 격차는 향후 확산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될 것인가? 필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① 아세안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역내 선발 아세안 국가들의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기대되며, ② 후발 아세안 국가들의 개발 및 소득 증대는 아세안 전체의 시장 구매력을 확장시켜 선발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③ 발전이 뒤진 내륙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중국과의 국경 무역, 중국의 중소기업 진출 및 중국 정부의 ODA 공여를 통하여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④ 일반적으로 동일한 액수의 투자 증가도 개발 초기단계의 후발 아세안의 경우 선발 아세안보다 더 큰 자본생산성을 구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한계는 아세안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1</sup> 박변순은 그 주된 이유로 수출 시장의 한계 및 한정된 수출 시장 안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을 거론한다. 과연 그러한가? 필자는 여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박변순과는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기존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 아직까지도 아세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그 전파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말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발전을 설명하는 다양한 기존 모델 가운데 대표적인 ‘안행렬’ 모델을 예로 들어보자.

이 모델의 핵심은 생산 과정의 자본 형성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의 수출 시장의 존재이다. 과거 선발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 경험에 관한 설명을 보면 자본 형성에서의 외자기업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제 문제가 되는 선발 아세안으로부터 후발 아세안으로의 성장세의 전파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 자본의 공급원이 기존의 선발 아세안, 미국, 일본과 더불어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수출 시장이라는 판로의 문제에서도 후발 아세안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안의 선발 아세안 국가들뿐 아니라 ACFTA를 통해 중국 시장과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 따라서 전통적 기존 ‘안행렬’ 모델은 ‘일본 → 니스(N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 선발 아세안 (및 중국)’ 또는 ‘일본 → NIEs → 중국 연안부 (및 선발 아세안) → 중국의 내륙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따라 최종적으로 후발 아세안으

<sup>21</sup> 전술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의 시장의 축소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초과생산능력으로 안행렬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국이 안행렬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Heng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첫째, 외환 유출의 적절한 통제하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서구로부터의 선진기술 습득 등 지출을 확대하고, 둘째, 동아시아 자체 내의 경제연계 및 협력강화 등의 정책적 처방을 강조한다(Heng, 2010).

로 귀결하게 된다. 어떠한 계열을 따르던 중요한 것은 후발 아세안의 경우 선발 아세안과 중국이라는 자본 공급처 및 수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특히 ACFTA 체결 이후 아세안 개별 국가와 역외국가들 간의 쌍방 FTA 체결 및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우리는 4개 영역의 역내 환경변화 — 역내 투자의 감소, 낙후된 역내 교통망, 역내 개발 격차 및 동아시아 성장 모델의 한계 — 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 보았다. 이러한 전망에서 얻을 수 있는 공통된 시사점은 이러한 환경 변화의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크게 부상하리라는 점이다. 즉,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통하여 동남아 국가들은 새로운 투자의 기회, 수출 시장을 확보하며, 특히 국경을 인접한 내륙 동남아 국가들은 낙후된 교통망을 개선하고 개발 격차를 좁혀줄 수 있는 든든한 인프라의 공급자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물론 미국의 복귀와 안간힘을 쓰는 일본이 이러한 중국의 역할을 적어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역내 환경의 변화는 향후 동남아와 중국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 2) 동남아 역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기인한 향후 전망

우선, 중국의 부상 및 중국의 접경 내륙 아세안 국가들로의 진출이 안보 및 기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주던 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분명히 아세안 국가들 특히 내륙 아세안 국가들의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준다. 돌이켜보면 과거 중국으로의 FDI 유입액의 상당부분은 홍콩, 마카오 및 동남아로부터였다. 예컨대 중국의 통계연감에서는 2006년 까지 아세안으로부터 중국에의 FDI 유입이 (홍콩영유를 제외하고) 전체의 약 6%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과거에는 선진 해양아세안 국가들의(특히 이 지역의 화교계 자본) 중국으로의 투자가 특징이었다. 이러한 아세안의 대중국투자는 현재에도 계속되지만 지난 10년간 나타난 보다 커다란 변화는 중국의 대동남아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내륙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특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위안화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분명 동

남아 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지만, 동시에 이들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경제 의존성 —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성 — 역시 커지게 될 것이다. 결국, 외교 및 군사적인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경제로부터의 영향은 북경과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내륙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무역 및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그러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양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경제와의 상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며,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 동남아 역외 지역과의 경제관계를 대중 경제관계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만이 아닐 것이다. 라디(Lardy, 2003)는 일찍이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게는 기회를, 그러나 아시아에게는 — 특히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 및 수출국에게는 — 도전을 줄 것임을 언급한 바가 있다. 실로 중국 경제력의 동남아로의 확장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이라는 애증 양면성을 가진다.<sup>22</sup> 중국 시장에서의 접근 및 중국 자본의 이용 가능이라는 기회가 있는 동시에, 세계 시장 및 아세안 자체의 시장에서 중국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특히 접경국에서는 막강한 중국 자본에 대한 두려움과 건설인프라 및 유통구조에서의 중국의존성이 위협적 요소로 작용한다. 메콩강 하류지역에서는 상류의 중국 측 댐 건설에 연유한 유량 감소, 어획 감소 및 환경 악화, 그리고 댐 방류 시 홍수 발생의 위험을 두려워한다. 또한 중국의 상품과 자본유입이 커질수록 현지 중국화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역시 부정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상당부분은 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중국화교가 가져갈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희옥, 2011: 65). 나아가 롱 리(Long Le)는 “중국이 중국의 증대하는 지역 및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동남아의 변화하는 인식을

<sup>22</sup> 대부분의 경제학 문헌은 (이 논문을 포함하여) 중국의 부상이 동남아 경제에 ‘위기’보다는 ‘기회’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예로 Kui를 인용한다. “The overall assessment is that the rise of China will benefit South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in terms of China’s role in the Asian production network, destination for investment, its outward investment and more importantly, its huge and growing domestic market”(Kui, 2007: 9).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논쟁을 국제화시키는 집단적 노력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고 경고한다(Le, 2010).

다음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는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한다는 정치 및 안보적 효과가 더욱 중요하겠지만 이 역시 동남아 지역의 향후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안보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베트남의 캄란만 해군기지에 진입하고 호주의 다윈에 군대를 배치하고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안보적 이유만이 아니라 경제적 동인 역시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 정치·안보적 행동이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 및 투자의 확장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원래의 목적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복귀는 정치·외교적 측면만 아니라 최근 TPP의 추진에서 보듯 경제적인 면에서의 복귀로도 볼 수 있다. 굳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유럽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현재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경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동아시아 중 동북아시아 3국에서는 미국과의 기존의 정치/경제 질서가 상당 부분 고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 동남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함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미국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 동남아 4국이 포함된 TPP를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러한 현존의 고착된 경제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중 동남아시아 지역이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력의 쇠퇴라는 커다란 추세와 함께 일본의 인식이 그동안 중시해 왔던 생산 기지로서의 동남아시아로부터 시장으로서의 동남아시아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일본 기업이 인식하는 동남아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였음이 지적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그러나 일본은 당분간 동남아에서 기존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한 중국의 팽창에서 잃고 있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교역과 투자의 하락세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식는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의 부상 이전에 이 지역에서 구축하였던 생산망, 유

통망, 나아가 일본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되찾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경제 회생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동남아 지역에서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인 2011년 11월 노다(野田佳彦) 수상은 일본이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23</sup>

### 3.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및 경제성장에 기인한 향후 전망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향후 동남아의 대외 경제관계 방향 결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역할의 핵심은 역시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의 방향 그리고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이다. 먼저 단·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대외 경제정책 중 가장 중요한 대외 영향(impact)을 가지는 것은 중국의 환율정책 또는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이다. 누적되는 무역 및 경상 흑자, 외환보유고 등으로 인하여 중국 경제가 위안화의 절상 압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안화 평가절상이 세계 경제, 보다 좁게는 동남아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아마도 가장 큰 영향 중의 하나는 그것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Sauvant, 2011).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 기업의 해외자산 구입 및 재투자 비용을 낮추면서 이미 중국 내에서 인건비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투자 및 진출의 문을 더욱 활짝 열게 만들 것이다. 과거 1985년 플라자(Plaza) 합의 이후 엔화의 평가절상 뒤 일본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선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찾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내륙 또는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로의 진출이 크게 고무될 것이다. 따라서 '주출거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중국 경제성장의 전망은 중국 자체의 관건을 넘어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다른 나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기적 전망의 예로 최근 중국의 전인대(全人大)에서 승인한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을 보면

<sup>23</sup> 일본이 TPP에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는 이면에는 물론 환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경제력 부상에 대한 견제와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초조함 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을 유지해 왔던 수출투자주도형 경제구조를 중국 소비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모델로 바꾸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 자체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계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수출 및 투자의 감소라기보다는 중국 국내 내수의 확대와 소비의 증가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현재 36%에 불과한 소비를 2015년까지 42~4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이다. 이는 물론 사회안 전망의 확대 등 국내 소비지출 증대가 주된 내용이지만, 이렇게 확대된 중국의 내수시장은 중국과의 교역상대국인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로치, 2011).

마지막으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국 경제성장에 관한 전망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미 많은 다른 국가의 성장 경험에서 보았듯이 중국도 (자본 형성 및 기타 투입물의 증가만으로도 당분간 성장세는 유지될 수 있으나) 투입물의 증대를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이며, 기술 진보, 생산성의 향상, 경제효율성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침체될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듯이 중국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으나 그 '당분간'이란 언제까지인가? 참고로 북경대 중국 경제연구센터(China Center for Economic Research)의 부소장인 양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은 도농공에 의한 급격한 공업화 그리고 1자녀 정책으로 인한 특이한 인구구조라는 두 개의 특징적 구조 전환,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구조 전환이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조 전환이 완성되는 15~20년 후에는 장기균형성장경로에 이르게 된다(Yang, 2011). 흥미로운 것은 양 부소장이 장기 경제성장 경로로의 진입 시기로 보는 20년 후, 즉 2030년대 초가 공교롭게도 그가 중국경제의 규모가 세계 1위로 될 것임을 예측하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이다.<sup>24</sup> 여하튼, 향후 10~15년간 중국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때까지 아세안의

<sup>24</sup> 중국경제가 1위 미국을 앞지르는 시점에 관하여 일본 내각부는 15년 후인 2025년으로 보고 있으며,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빈드 수브라마니안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추월 시점 2030년은 그나마 늦은 편에 속한다. 중국의 미국 추월 시점을 2020년 전후로 보는 것은 글로벌 컨센서스가 가깝다(조선일보, 2011).

경제성장은 중국의 성장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히 후발 아세안의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중국의 경제성장세를 잘 활용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및 향후 성장 전망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였으며 이들이 동남아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대체로 긍정적, 낙관적인 면모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유지해온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은 커녕 현재 9%대의 높은 성장률조차 향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우며 조만간 보다 낮은 성장률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에서의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재정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리라는 전망 아래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외부적 요인 이외에도 중국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금융섹터와 국영 기업의 구조적 문제, 도농공 및 인건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노동 시장 문제, 지역 간 소득 및 개발 격차 문제 등 산재한 경제 및 경제 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향후의 경제성장이 중국 당국이 바라는 대로 순탄하게 이어질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아세안에 대한 영향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 자명하다.

25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바수송(巴曙松) 부소장에 의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대에서 8%대로 낮아지고 — 내년 성장률은 8.5~8.8%를 기록할 것임을 예상한다”. 또한 “최근에 공개된 중국의 11월(2011년) 수출 증가율은 13.8%로 2009년 12월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다. 중국의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은 5% 증가에 그쳤고 이탈리아는 23% 독일은 1.6%씩 각각 감소해 유럽발 충격이 현실화 됐다. — 바클라이즈 캐피털은 최근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8.4%에서 8.1%로 낮췄다”(한국경제신문, 2011).

## IV. 결론: 한국의 대동남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 1. 요약

아세안이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못지않게 한국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지는 오래되었다. 이제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에서 아세안은 EU나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위치에 있다. 한국의 직접투자도 유럽, 미국, 중국에 이어 아세안을 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주요 지하자원을 공급하는 곳도 중동에 이어 아세안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향후 한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충지인 아세안이 지난 10여 년간 크게 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세안에서의 중국 경제력의 부상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 지역을 안일하게 여겨왔던 미국과 일본은 크게 당황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자 부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10여 년간 아세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미·중 간의 경제력 이동을 — 즉, 중국의 부상 및 미국(일본)의 쇠퇴 — 무역, 투자 및 경제협력의 관계에서 살펴본 뒤, 향후 이러한 경제력 이동의 향방을 결정하는 동남아 역내/외의 경제 환경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변화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에 주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였던 점은 향후 동남아와 미·중 간의 경제관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및 중국의 중·장기적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었다. 왜냐하면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행, 중국 ‘주출거 전략’의 지속적 보강,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 성장 전략의 변화를 시사하는 12차 5개년계획의 이행 등은 중국 자체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넓게는 세계 경제에, 좁게는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2. 한국의 대동남아 경제정책의 방향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 미·중 간의 경제력 이동, 그리고 동남아 역내/외의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한 동남아와 미·중 간의 향후 경제관계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그것이 우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경제 전략과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경제력의 이동에서 한국이 깊이 간직해야 할 교훈 중의 하나는 아세안 10개국이 개별적으로는 작고 약하나, 하나의 연합체로서의 아세안은 — 비록 미흡할지라도 — 그나마 중국의 부상과 확장에 대응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슷한 입장의 한국은 아세안-중국 간의 관계를 반면교사로 삼고 아세안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정책은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의 하나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 전략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면서 한·아세안 양측 모두에게 협력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동남아 경제정책은 나라별(country-specific) 그리고 선진 및 후발 아세안에 각각 다른 지역별(region-specific) 정책과 전략을 가져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다음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세안의 발전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경제외교가 되어야 한다. 여유만 있다면 우선 ODA 공여의 증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동남아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저개발 동남아 국가들은 제조업의 발전 없이 경제가 도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의 한국 근로의 문을 넓히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소득 증대와 기술 습득의 기회이고 한국으로서도 — 한국 노동에 피해가 없는 한 —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세안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세안 안에 어느 정도의 공업 성장과 수출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소득 수준이나 삶의 질 개선은 미미하며 특히 기술 역량의 개선은 많이 미흡하다. 한국은 산업 기술을 수입해 이를 개량하고 개선하여 독자적인 산업 기술 체계를 수립했고 정부, 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육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집약적인 농업경작기술, 전자산업의 기술, ICT 부문의 기술 등에서 아세안 특히 후발 CLMV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흑자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자원수입국에 대하여는 무역 적자를 보이나 기타 아세안 7개국에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는 91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들 무역 흑자국에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무역 적자의 GDP 비율이 비교적 높은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아세안에 대하여 무역 적자를 보이는 경제적, 외교적 의미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개발 아세안국에 대하여 특혜 조치를 확대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 자원 및 기타 자연 자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아세안과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연 자원 확보라는 상호 이익을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를 넘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는 동남아 경제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의 시장경제 통합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동남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더욱이 아세안은 현실적으로 역내의 경제발전 및 정치발전의 격차 때문에 아세안+3체제 — 즉, 동남아와 동북아를 합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 의 주도자가 되기 어렵다. 비슷하게, 한국은 동북아경제의 강국이자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위치하여 그 동안 중재자 및 교량 역할을 자임해 온 바 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주도를 두려워하는 아세안을 이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아세안이 이익 관계에 앞서 공존과 동반자의 관계임을 인식시키는 가운데 중규모 국가로서 제휴와 연합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에 한 축의 또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투고일: 2011년 11월 22일 | 심사일: 2011년 12월 3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3일

## 참고문헌

- 김종길. 2008. “Chinese FDI towards ASEAN.” 『동남아시아연구』 18권 2호, 211-25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중국의 대 동남아: 현황과 전망, 전문가포럼 회의결과 보고서』 (1월 11일).
- 로치, 스티븐. 2011. “全人大가 외친다 ‘중국, 이제 내수다.’” 『조선일보』(3월 5~6일).
- 박변순. 2011. “대동남아 경제외교의 현황과 과제.”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중관계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외교통상부 용역연구. 부록: 191-224.
- 이선진. 2011. “메콩강 유역 방문기 제4서신.” 미공개 편지(1월).
- 이희욱. 2011. “중국의 對동남아 정책.”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중관계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외교통상부 용역연구. 6장: 46-67.
- 조선일보. 2011. “미국 GDP 추월하는 中 대국굴기의 해는?”(2월 19일).
- 한국경제신문. 2011. “중국경제 ‘8·4’시대 진입”(12월 14일).
- 木村福成·石川幸一(編著). 2008. 『南進する中國とASEANへの影響』, ジェトロ.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0. 『中國統計年監 2010』.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 『2008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9월.
- 眞家陽一. 2008. “中國の對ASEAN經濟戰略.” 木村福成·石川幸一(編著). 2008. 『南進する中國とASEANへの影響』, ジェトロ, 第2章, 41-67.
- ASEAN Sec. 2009. *ASEAN Community in Figures 2009*.
- ASEAN Sec. 2010. *ASEAN statistics*. July.
- Berger, Blake. 2011. “Could Domestic Discord Undermine the United States

- Engagement of East and Southeast Asia?: An update of U.S. trade Policy towards the Region,” *ASEAN Monthly Commentary*. August.
- Clinton, Hillary Rodham. 2009. “Strengthening Partnership in SE Asia.” *Bangkok Post*. July 21.
- Heng, Siam-Heng Michael. 2010.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Flying Geese Model*. East Asian Institute (EAI), Working Paper 156, Nov.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8 and 2010.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Klein, Brian P. and Kenneth Neil Cukier. 2009. “Tamed Tigers, Distressed Dragons.” *Foreign Affairs* 88(4), July/August.
- Kui, Ng Beoy. 2007. “The Economic Rise of China: Threats and Opportu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east Asia.”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25.
- Lardy, Nicholas R. 2003. *The Economic Rise of China: Threat or Opportunity?* Federal Bank of Cleveland, August 1.
- Le, Long S. 2010. “The values dimension of Southeast Asian development and the rise of China.” *East Asia Forum*. Dec. 22.
- Lum, Thomas, Wayne M. Morrison, and Bruce Vaughn. 2008. “China’s ‘Soft Power’ in Southeast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Jan. 4.
- Sauvant, Karl. 2011. “What will appreciation of the Chinese Yuan do to China’s inward and outward direct investment?.” *East Asia Forum* 8. Mar.
- Subramanian, Arvind. 2011. “Is China already number one? New GDP estimates.” *PIIE Update Newsletter*.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3 Feb.
- UNCTAD. 2006. “FDI from Developing and Transitional Economie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 Yang, Yao. 2011. “China’s Export-led Growth Model.” *East Asia Forum*. Feb. 27. <http://eastasiaforum.org/2011/02/27/chinas-export-led-growth>
- Zhang, Liqing and Zhixian Sun. 2008. “Effect of China’s Rise o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Change and Restructuring* 41(4), 315-330.

---

**Abstract**

## Changes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ith a Focus on their Policies regarding Southeast Asia

Jong-Kil Kim Inha University

---

This paper examines the shift in the economic power from the US to China, namely the rise of China and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S in the world economy, which is exacerbated by a similarly unhopeful situation in Japan. This ‘decline’ of the US has been evident in Southeast Asia during the past decade. This paper approaches this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Changes in this economic situation that determines this power shift, both in and outside of the Southeast Asian region, are investigated. Next, this paper attempts to determine the implications of the predictable changes in this economic situation, with respect to the future cours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Southeast Asia and the US, or between Southeast Asia and China. Finally, this paper looks at how these implications affect Korea’s economic policy regarding Southeast Asia. In this proces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China’s economic policies, both domestic and foreign, deemed crucial to both China’s long-term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futur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ic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 This is because maintaining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hina’s economic policies — for instance, the ACFTA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the ‘Going-Global’ policy, the 12th Five-Year Plan, etc. — not only directly affects the prospect of China’s growth. It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especially on Southeast Asian economy, albeit indirectly.

**Key Words** | economic power shift, ACFTA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Going-Global' policy, 12th Five-Year Plan